

AI 급속한 발전에 잇단 경고 목소리

일자리 뺏고 무기 악용... 통제불능 AI, 인류에 부메랑

기후변화·인류 논의시간 AI에 뺏겨
회계사 일자리 20년내 컴퓨터 대체
5년간 일자리 710만개 상실 예고

“인공지능(AI)이 도입되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실직을 가져오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영역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주장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11일 영국 신문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서리대학 물리학과 교수인 짐 알-칼릴리는 BSA 연례모임인 영국과학축제(BSF)를 앞두고 “AI 발전이 너무 빨리 이뤄지고 있어 충분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알-칼릴리는 “2년 전만 해도 미래에 관해 논의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기후변화나, 인류가 당연한 도전인 테러나 항생제 내성, 세계적 빈곤, 전염병 중 하나를 말했다”라며 “하지만 현재는 AI의



서울시내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이용객들이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드론쇼 코리아'를 찾은 관람객들이 대한항공 부스에 전시된 무장운용 무인 헬기,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드론, 차세대 스텔스 무인전투기 등 다양한 군용 무인기를 구경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라고 확신하며, 좋건 나쁘건 간에 이는 다른 모든 이슈를 덮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로봇이 대체가능한 사무·행정과 제조·생산업종을 중심으로 약 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노동시장은 컴퓨터와 AI를 결합해 자동화를 진행하는 중이며 공장 노동자와 비서 등은 컴퓨터와 로봇으로 상당수 대체됐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패스트푸드점 등에 무인주문대(키오스크)가 설치되면서 주문을 받는 알바가

해고되는 사례가 생겼다. BGF리테일은 현재 무인형 셀프결제 CU 편의점을 3곳 운영하며 효과를 살피고 있는 중이다.

육체노동 뿐만이 아니다. 영국 대학 연구 자료에서 회계사는 향후 20년 내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94%나 된다. 현재 주식실황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AI 로봇기자가 개발되고 있다.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암 환자 진료 및 검사기록, 유전 정보 등을 'IBM 왓슨'에 입력해 맞춤형 치료법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AI를

이용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짐 알-칼릴리 교수는 AI 기술이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15조 달러 어치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GM) 기술처럼 일반인들이 이를 두렵고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정치인들은 '독약'으로 간주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AI가 창출하는 일자리 숫자가 그로 인해 실직하는 일자리 숫자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한다면 이런 주장은 현실화될 수도 있

다고 해석한다.

AI는 나아가서 군사무기에도 쓰일 예정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다양한 군사 작전을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무인 AI 잠수함을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의 메이븐 프로젝트는 AI 기술을 이용해 드론(무인기)이 목표물을 더 정확하게 타격하도록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도 4월 국방부가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군 정찰기, 무인기 등이 수집한 영상정보를 분석하는 지능형 ICT 감시정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알-칼릴리는 급속히 진전되는 기술이 통제되지 않고 규제받지 않는 소수의 초강력 기업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을 경고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해커들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들이 전력공급망이나 운송 시스템, 군사시설 등을 관리하는 AI를 해킹하는 것은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면서 “AI는 앞으로 지난 몇십년간 인터넷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생활을 바꿔놓을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자”고 말했다.

/양명대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털어서 먼지 나올때 까지 집요한 경찰, 조양호 올 3번째 소환

평창동 자택경비 회삿돈으로 대남
재벌총수 털기·과잉 수사 논란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진영 기자 son@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끝없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연초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개월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이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특히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 사례는 그동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 회장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 경찰 출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달 4일에는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입건하고 원씨와 회사 직원 등 총 32명을 불러 조사를 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6월 28일에도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처럼 특정기업 한 곳을 두고 수사기관과 정부 각 부처가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간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재벌총수 털기'라는 시각을 보이는 곳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 한진그룹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보면 털어도 안나오는지 끝까지 해보자는 마구잡이식 수사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

‘욕설·보복 논란’ 윤홍근 회장 무혐의 (제너시스BBQ)

검찰 “위력행사 여부 확인 안돼”

‘가맹점주 욕설·보복’ 논란이 제기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사진)이 검찰 수사 결과 혐의를 벗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김씨는 BBQ 측이 판매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회장과 BBQ가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허위·과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통상적 근거로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늦게나마 감춰졌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 투명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패밀리(가맹점)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 앞서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작가로 구성된 빛소리 글로벌 예술협회의 지적장애 3급 박혜신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청와대

“발달장애인 차별없는 포용국가 만들 것”

文 대통령 “임기 내 종합대책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들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살아가기 훨씬 힘들고 부모님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들다. 부모가 온종일 매여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가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조기에 거기 맞는 치료를 받게 한 뒤 보육·교육·돌봄·직업훈련·취업·경력관리 등 전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고, 국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 장애인들은 전국에 거의 1만800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장애가 심해 거의 집에서 격리되다시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를 확대하는 등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힐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